

# ‘작지만 의미있는’ 10·16 재·보궐선거… 與野 리더십 판가름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최대 격전지 野 승리 시 한동훈 대표 리더십 균열  
영광군수 선거, 사전투표율 최고치 野 텃밭서 진보정당 약진… ‘당혹감’  
李 “민심 거역한 정권 일깨울 기회”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 마련된 송파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지분류기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강화군수 보궐선거, 영광군수 재선거, 곡성군수 재선거가 열리는 10·16 재·보궐선거가 ‘작지만 의미있는 선거’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 대표의 리더십에 크고 작은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불리는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야권단일화가 이뤄지면서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가 됐다. 최근 4번의 선거에서 금정구민들은 국민의힘 등 보수정당에 3번의 승리를 안긴 바 있다.

그러나 윤일현 국민의힘 금정구청장 후보가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금정구청장 후보에게 패배하게 된다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리더십의 균열이 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앞두고 있는 한 대표 입장에서는 반드시 잡아야 하는 선거다. 한 대표는 지난달 11일부터 10월15일까지 부산 금정구만 총

6번 찾아 지지를 호소하는 강행군을 소화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여당 텃밭에서 하나로 뭉쳐 승리함으로써 좋은 분위기를 이어 나갈 수 있다. 다만, 병환으로 인한 별세로 치러지는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혈

세 낭비’라고 말한 것이 논란이 되면서 뜨거운 선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바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날(14일) 밤 CBS라디오에 출연해 “정치적으로 보면 금정구라는 곳은 지금까지 국민의 힘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화한 후보가 이기게 되면 즉각적으로 집권 세력 내부에 큰 파문이 일어날 것이라고 본다”며 “당장 한 대표가 대표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영광군수 선거의 경우 장세일 민주당 후보, 장현 조국혁신당 후보, 이석하 진보당 후보가 3파전을 벌이고 있다. 뜨거운 선거 열기를 반영하듯, 영광군수 재선거의 사전투표율은 43.06%로 2014년 사전투표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으로 여겨지던 영광에서 신홍 진보정당이 약진하면서 민주당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

기다. 조국혁신당은 일찌감치 호남에서 한달살이를 하며 지역주민들을 만났고, 진보당은 민주당에 피로감을 느끼는 유권자들에게 다가가 농사와 청소 등을 돕는 등 바닥 민심에 다가섰다.

민주당의 텃밭인 영광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지 못한다면 이 대표의 리더십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조국혁신당이 승리할 경우, 국민의당의 사례처럼 호남 지역 정당으로서의 발판을 삼을 수 있다고 내다보는 시각도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재판 출석으로 지원 유세에 합류하지 못하자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리고 “이번 선거는 전남 영광, 곡성군수,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한 명을 선택하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한 채 민심을 거역하는 정권에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일깨울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대통령실 관저이전·김건희 여사 황제관람 의혹 ‘집중질의’

### 법사위·문체위 국감

野 “관저 이전 감사 회의록 제출해야”  
與 “野 압박 ‘보복성’ 성격 짙어”  
김 여사, KTV 무관중 공연 관람 의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에서 15일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과 김건희 여사 국악 공연 관람 논란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감사원을 대상으로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과 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회의록을 감사원이 제출해야 한다며 압박했다.

반면, 여당은 민주당의 압박이 ‘보복성’ 성격이 짙다며 감사위원들이 자유로운 발언이 공개되면 추후 감사원의 업무 수행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오후 법사위 질의에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지금도 감사원이 대통령의 지원기관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최 원장은 “감사를 통해서 국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라

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지금도 국정을 지원하고 있다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감사청구로 하게 된 용산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에서 왜 하필 용산으로 갔느냐가 이 사건의 ‘머리’에 해당한다. 관저의 이전 비용이 얼마나 들었느냐, 이전 과정에 누가 관여했느냐는 ‘몸통’”이라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어떠한가. 284억원의 공사계약만 감사하고 주의 통보를 내린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몸통과 머리를 빼놓고 ‘발가락’만 감사한 결과”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대통령실과 관저를 왜 이전에 대한 이유”라며 “감사원은 정부 중요한 정책 결정이니까 감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왜 감사했다. 이것도 중요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은 공무원을 직무감찰하고 세입세출 결산 등 각 기관의 회계 결산을 하는 중요한 업무를 하는 헌법기관”이라며 “법사위가 양원제로 치면 상원급 상임위인데, 감사하면서 야당 의원이 보이는 행태를 보면 제가 어안이 병병하다”고 지적했다.

문체위 국정감사는 KTV 한국정책방송원의 국악 무관중 공연에 김 여사가 찾아와 ‘황제 관람’을 했다는 의혹이 야당의 집중 공격대상이 됐다. KTV 한국정책방송원의 조 모 PD는 김 여사의 황제관람 논란과 관련해 문체위로부터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날 출석하지 않아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평생 무관중 방송에서 리플렛이 있는 경우를 한번도 못 봤다”며 “이 견적상 리플렛이 한 장당 4만원 꼴이다. 과연 황제관람에 걸맞은 금액”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200만원이나 들어서 50부를 제작했다. 무관중 공연엔 절대 필요하지 않은 ‘VVIP’를 위한 고가의 의전 물품이다. 철저하게 사전에 기획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태홍 기자

## ‘티메프 사태’ 구영배, 국감 증인 불출석 사유서 제출

(뉴텐그룹 대표)

형사 피의자로 검찰 수사 중  
국회 증언내용 재판에 영향 우려



일 이틀간 구 대표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구 대표와 티메프 경영진들이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대금 등을 가로챘다고 봤다. 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메프에 약 7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또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위시’를 인수하기 위해 671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대규모 미정산사태를 일으킨 티메프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이 5만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만 1조2000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구 대표가 자신의 재판을 이유로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을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티메프 사태로 소비자와 입점업체의 피해가 잇따르자 1조6000억원의 피해 구제 자금을 투입한 바 있다. 티메프 피해 판매자·소비자 연합인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는 구영배 뉴텐 회장과 티메프 경영진에 대해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구 대표는 지난 7월30일 티메프 사태 피해가 발생하자 열린 국회 정무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지난 15년간 제 모든 걸 걸고 비즈니스를 키우는 데만 집중했고 사익을 추구한 적 없다”면서 “시간을 주시면 티몬과 위메프를 구조조정 및 합병해서 정상화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영장심사 당시엔 정산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한편, 정무위 소속의 한 국회의원은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수사 중”이라는 이유는 국감 불출석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인정하면 국감을 형해화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 尹 “동남아 순방, 실질 혜택으로 이어져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성과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동남아 3개국 순방 성과로 경제협력분야에서의 전략적 공조 강화, 외교 네트워크 강화 등을 꼽으며 “이번 순방 성과가 국민께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각 부처의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필리핀·싱가포르 국민방문과 라오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의 참석 등 성과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필리핀 국방방문의 성과로 ▲수교 75년 만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한-필리핀 FTA 조속 시행 ▲대형 해상교량 및 라구나 호수순환도로 등 필리핀 대형 인프라 사업 진출 ▲핵심원자재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바탄 원전재계 타당성 조사 협력 MOU 체결 등을 들었다. 이외에 군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 방산 수

출길도 뒀다는 점을 언급했다.

싱가포르 국민방문 성과로는 ▲내년에 수교 50주년 계기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합의 ▲LNG 협력 MOU 체결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 체결 등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불확실한 대외여건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등 아세안 계기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정상들과 나눈 논의 결과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관련해 “양측은 최고 단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선언했다”며 “우리가 아세안과 대화 관계를 수립한 것이 1989년인데, 이후 35년간 우리의 대(對) 아세안 교역은 23배, 투자는 80배, 인적 교류는 37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서예진 기자 syj@